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2017. 10. 31.



수산업관측센터 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목차

I

발표 개요

II

어촌공동체와 어촌사회 변화

III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IV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I. 발표 개요

배경 및 필요성

- 어촌은 전통적 수산업 생산 중심에서 어촌의 다면적 역할을 증시
 - 어촌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공동체인 어촌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 역할을 담당
 - 최근 어촌은 수산업 이외에 체험, 전통문화, 도시와의 교류 등으로 확대, 귀어·귀촌으로 구성원 다양화
 - 정부는 어촌의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한 제도 및 정책 정비 : 어촌종합개발, 어촌특화발전 등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안정적 공급, 어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쾌적한 환경제공
- 어촌 및 어촌공동체의 구조적 문제 ⇒ 어촌사회 변화, 정책 수요에 대응이 힘든 상황
 - 어촌 : 도시로 인구 유출, 상대적 생활환경 낙후 등으로 고령화 및 공동화가 진행되어 활력이 저하
 - 어촌공동체(어촌계)는 어업생산 활동에만 국한, 협동적 관계→개인적 이익 중시, 공동체 결속력 약화, 지구별 수협 지도·감독 저하, 정부사업 수행 역량 약화
 - 귀어·귀촌사업의 배타성 존재(주민들과 갈등), 공동체 진입 어려움, 어촌 변화에 대응 한계
- '앞으로 10년 뒤 어촌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합리적 재편 가능?
 - 어촌사회의 변화에 대응·주도하여 활성화 기여하는 어촌공동체 모습? : 폐쇄적 VS.개방과 협력
 - 기존 어촌공동체의 역량 강화? : 지역 조직 지원, 네트워킹 강화 등
 - 어촌공동체의 발전방향? : 국민들의 Need 부합, 수산업 + 타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어촌공동체 가능

I. 발표 개요

범위

■ 어촌 정의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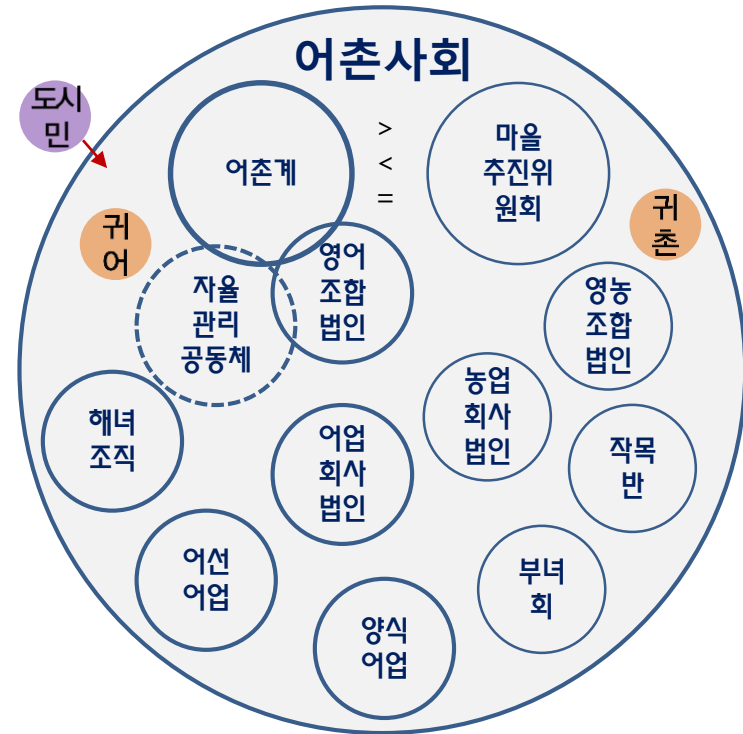
-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에 배후지에 있는 지역 중에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畝·面·洞의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외한 지역

■ 어촌공동체?

- 공동체 :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 : 한민족문화대백과
- 어촌공동체 : 어촌의 수산업 또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공동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어업공동체+마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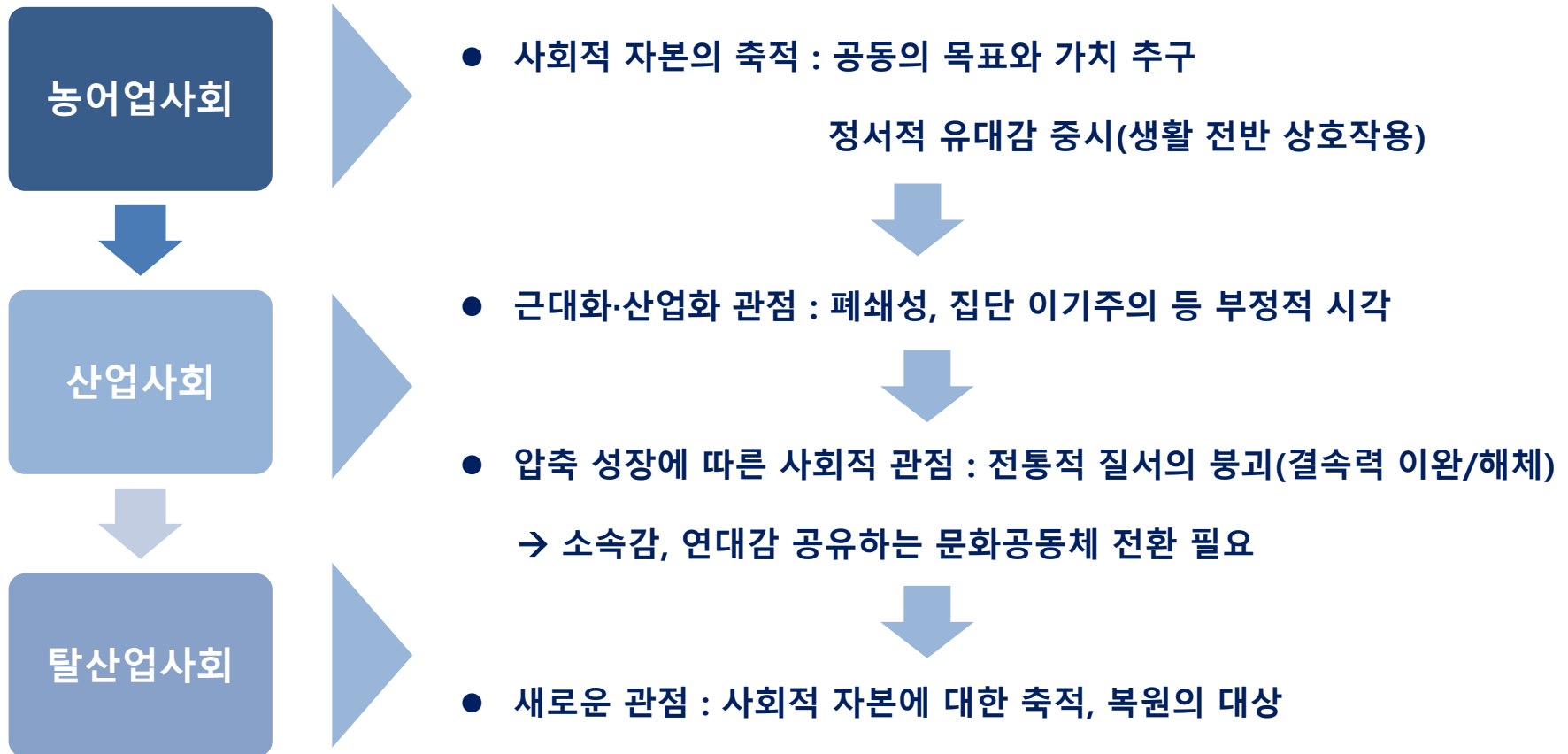
→ 대상 : 어촌공동체 중 어촌계 중심으로 검토

어촌계 : 연안어장 소유·이용 주체, 어촌계에서 자율관리공동체, 영어조합법인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내수면어업계, 마을협의회 등), 정부사업의 직간접 수행 주체



Ⅱ. 어촌공동체와 어촌사회 변화

공동체에 대한 시각



Ⅱ. 어촌공동체와 어촌사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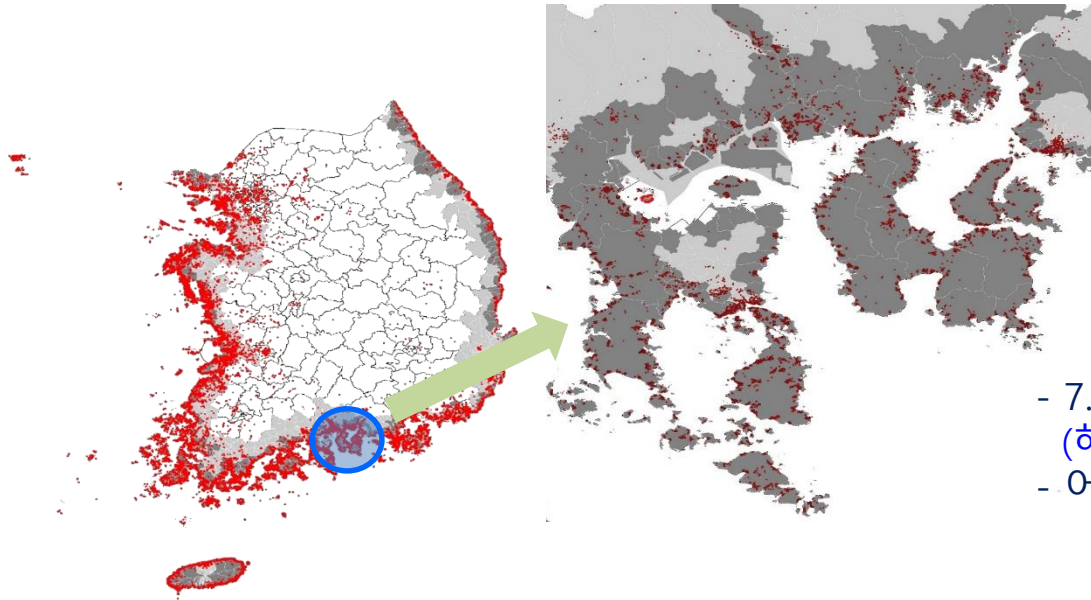
어촌공동체 정의 및 특징

어촌의 수산업 또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공동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

구분	농촌공동체	어촌공동체
행정구역	읍·면	읍·면·동 (도시지역 포함 → 도시어촌 존재)
경제활동 (소유)	경작지(논, 밭, 과수, 초지 등) 육지에 존재 (개인 또는 법인)	어장(어선, 양식, 맨손) 해면과 내수면, 염전은 육지에 존재 (공유수면 국가소유, 염전 개인소유)
경제활동 공간 소유	사유재 (직영 또는 임대)	공유재 (임대차 불가)
촌락특성/ 분포(밀도)	경작지 기반 / 산재(저밀도)	공동체 기반 / 밀집(고밀도)
경제활동 공간과 촌락과의 관계	연관성 크지 않음	매우 밀접한 관계 (어항, 어장 배후에 촌락이 존재)
농업인 및 어업인 자격요건	1. 농지원부 등록(소유 또는 임대) 2. 주민등록 이전(농촌) 3. 농업경영체 등록 - 300평 이상 농지 경작 - 90일/120만원 이상/年	1. 면허, 허가, 신고어업인 2. 주민등록 이전(어촌) 3. 어업경영체 등록 - 60일/120만원 이상/年

Ⅱ. 어촌공동체와 어촌사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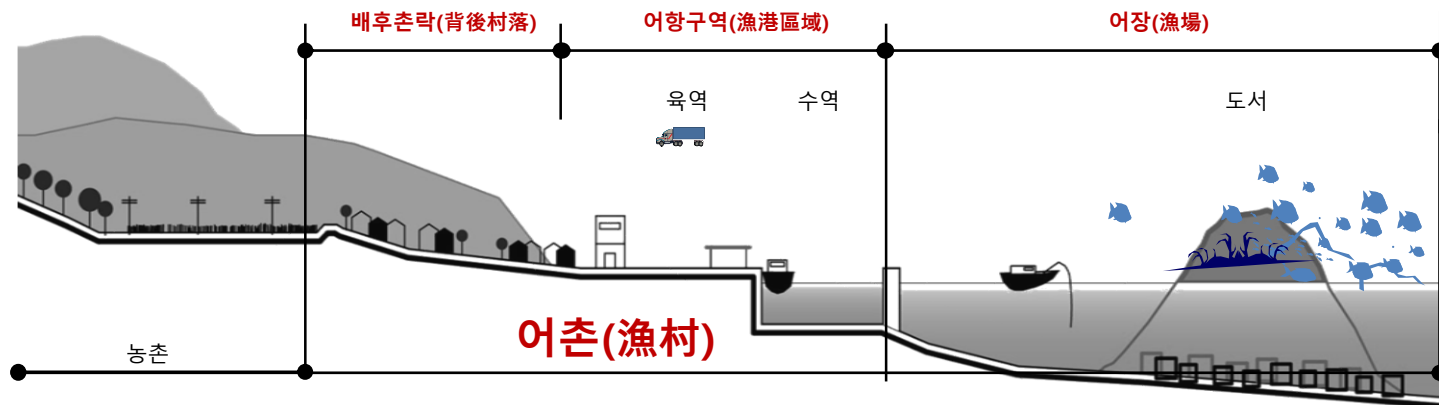
어촌공동체 촌락의 특성



어촌공동체의 공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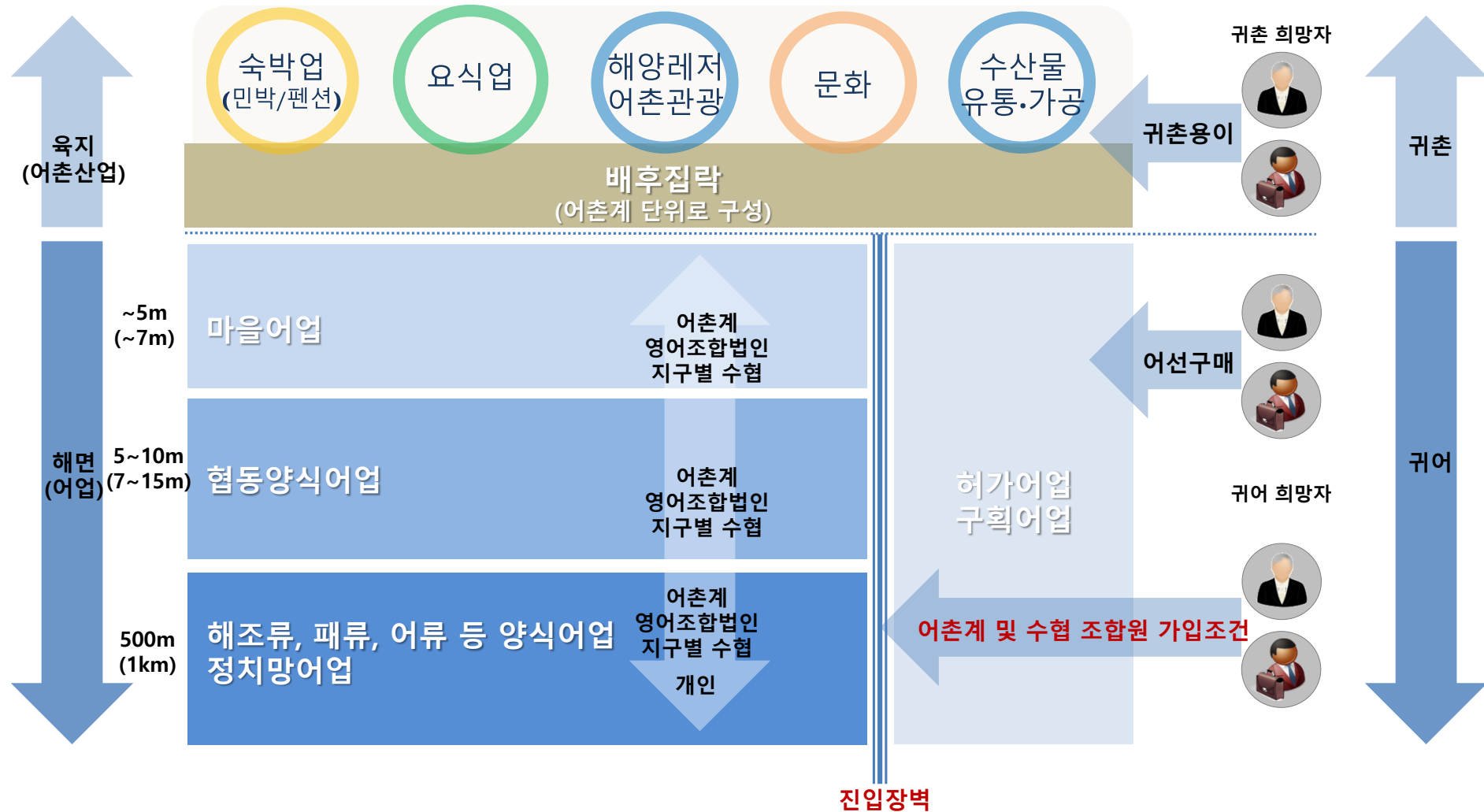
- 어항배후에 집락 형성
- 항세(港勢)에 비례
- 어항+어장을 기반 형성

- 7.46km 당 1개 어촌마을 분포
(해안선 길이 14,962km / 어촌계 수 2,005)
- 어장여건에 따라 지역 간 편차 큼



Ⅱ. 어촌공동체와 어촌사회 변화

경제활동 및 진입장벽



Ⅱ. 어촌공동체와 어촌사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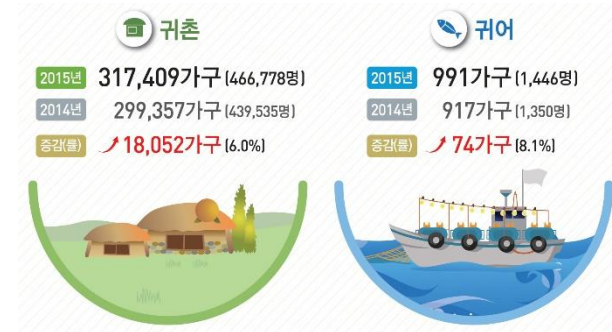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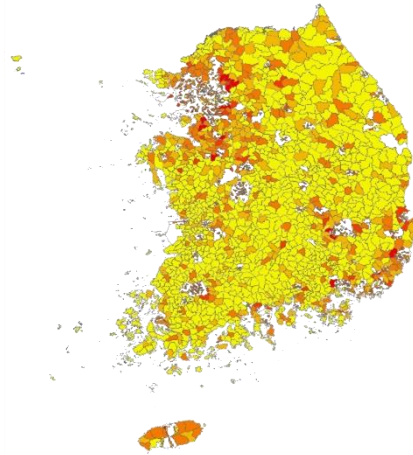
어촌사회의 대외적 변화

Berg의 도시발전 단계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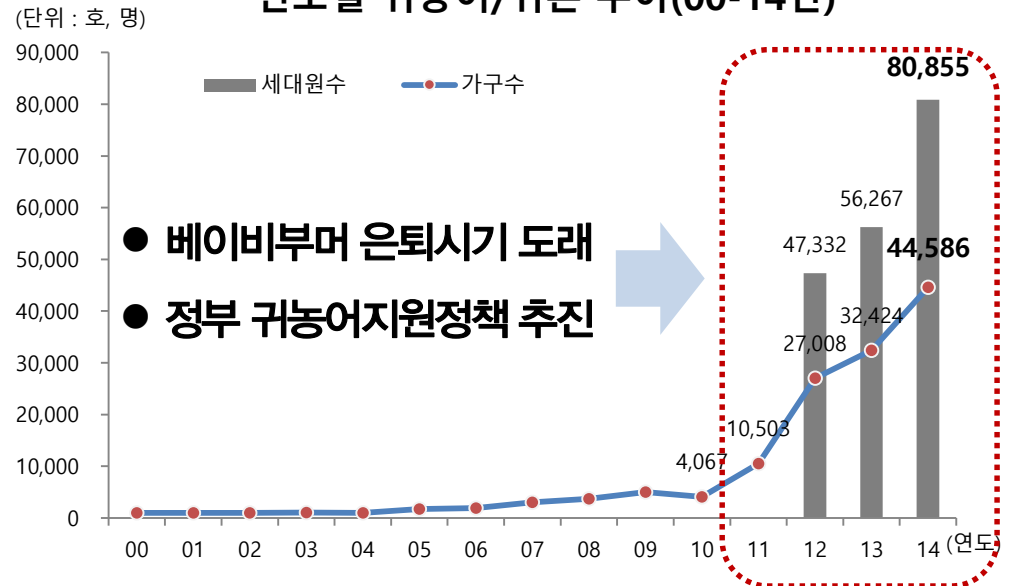


읍면동 인구수(거점 도시로 집중)

귀어귀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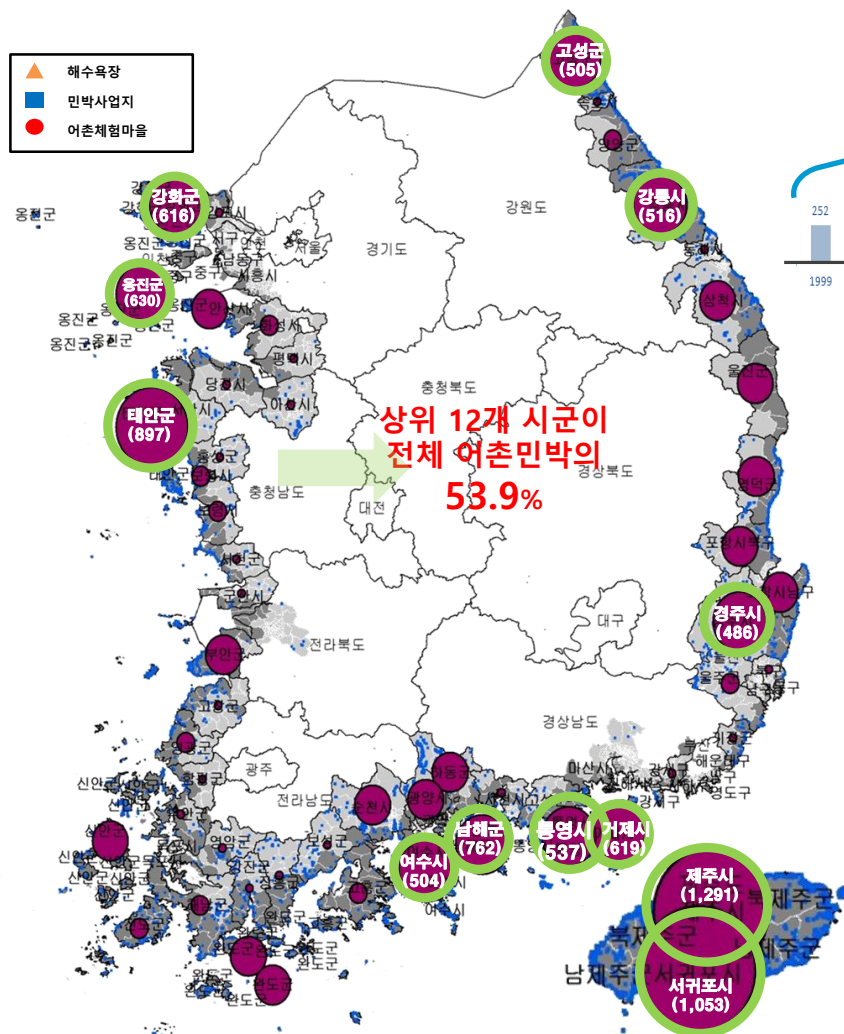


연도별 귀농어/귀촌 추이(0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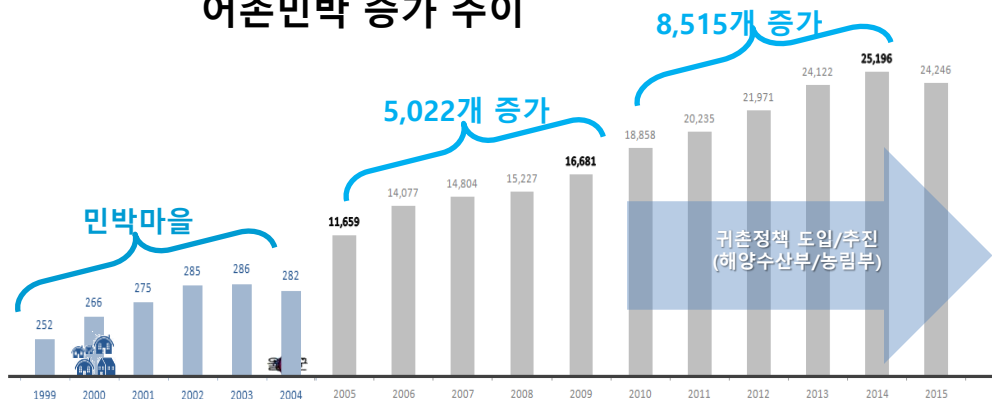


Ⅱ. 어촌공동체와 어촌사회 변화

어촌사회의 대외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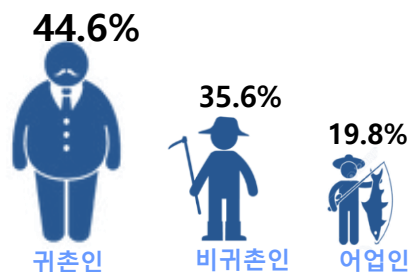


어촌민박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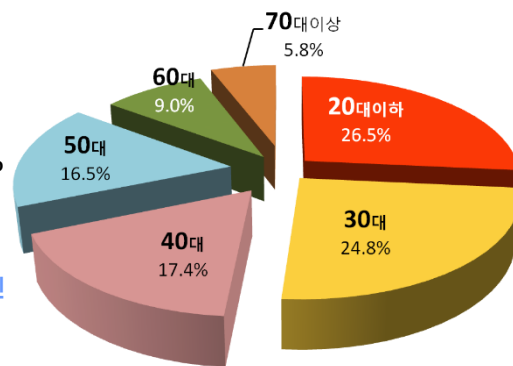


→ 귀촌정책 도입 이후 어촌민박 증가
 (농업 '10년, 어업 '11년)

어촌민박 사업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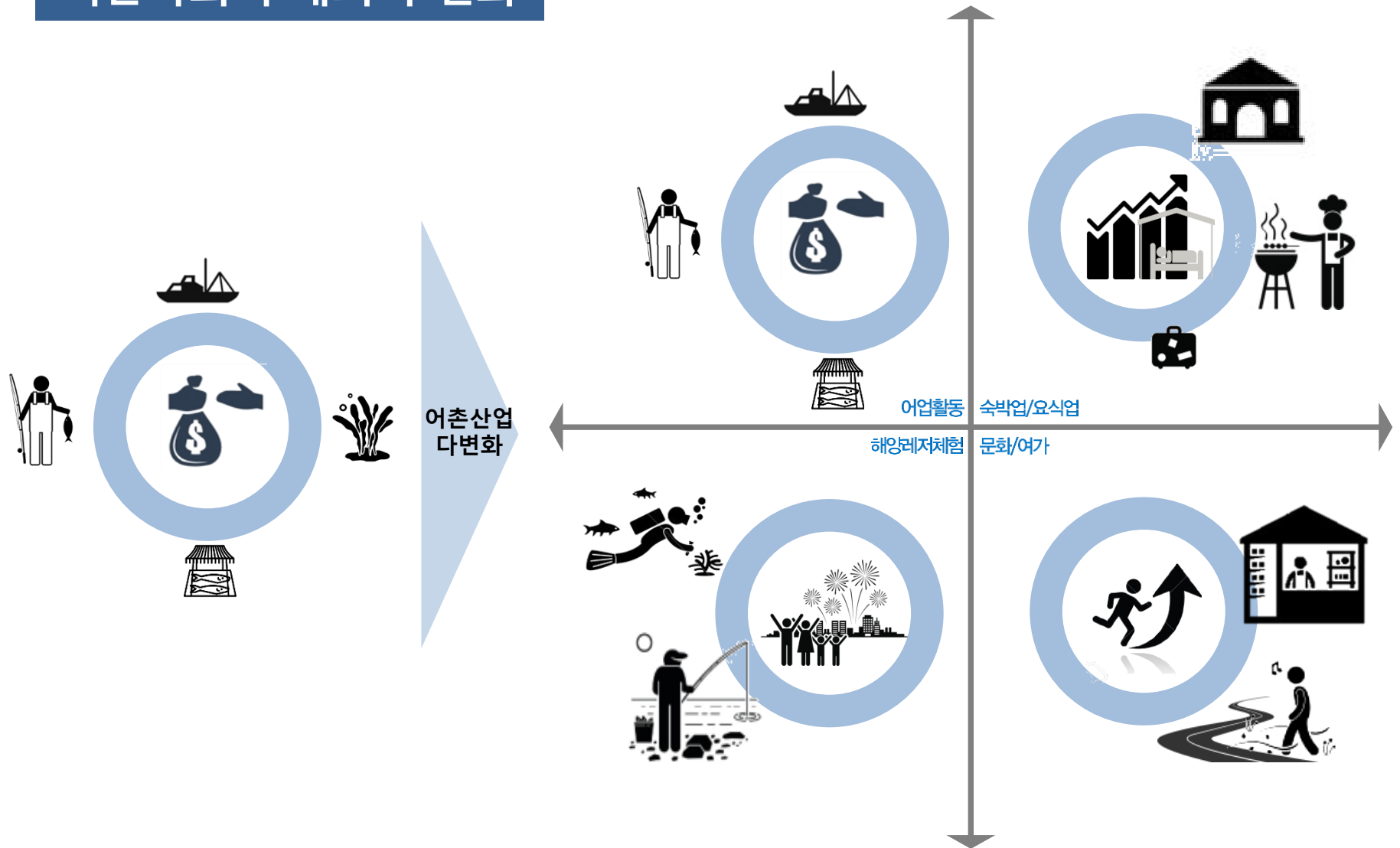
귀촌인의 연령별 구성비



→ 귀촌인의 경제활동, 경제력을 통해 어촌민박
 → 젊은 층의 귀촌인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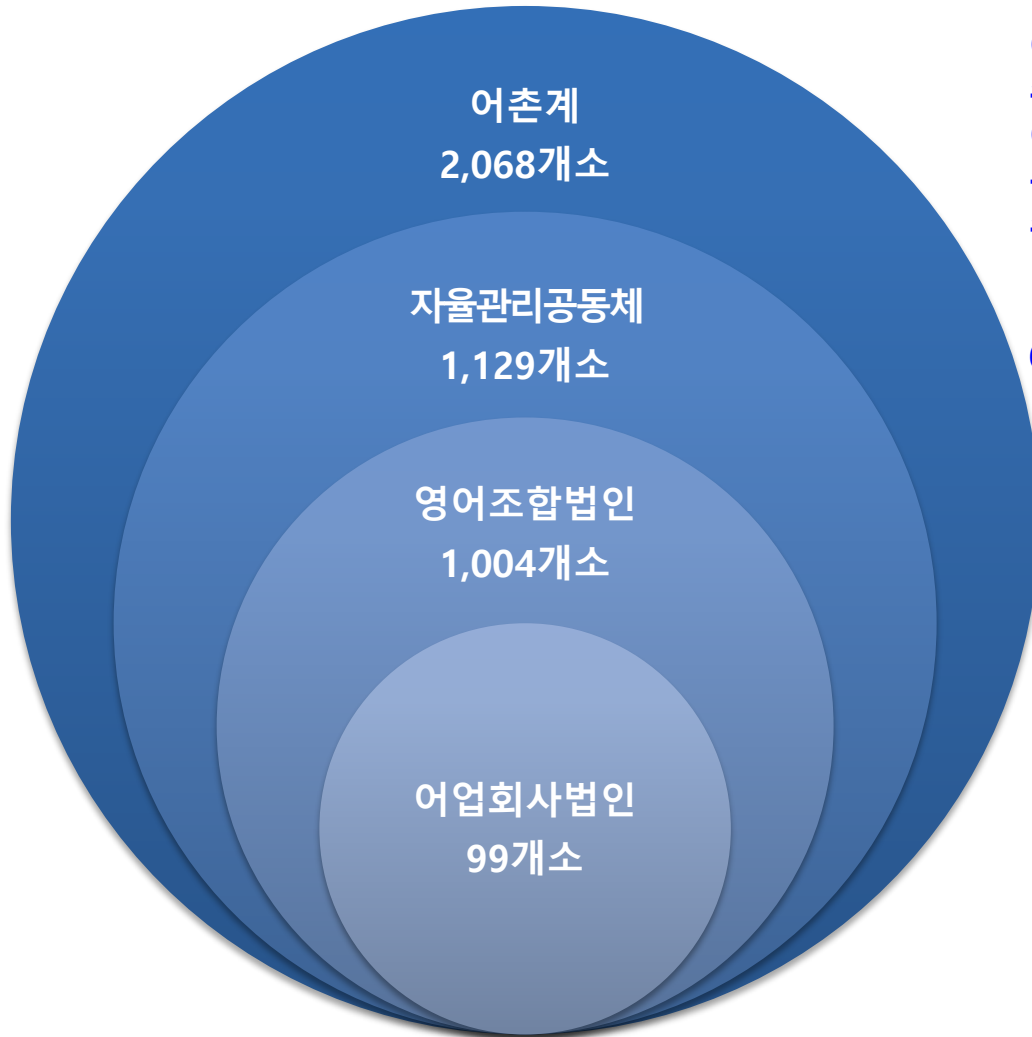
Ⅱ. 어촌공동체와 어촌사회 변화

어촌사회의 대외적 변화



Ⅱ. 어촌공동체와 어촌사회 변화

어촌사회의 대내적 변화



어촌·어항법 : 어촌종합개발
수산자원관리법 : 자율관리공동체 육성
어촌특회발전지원특별법 : 생산·가공시설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 어촌지역발전, 삶의질 향상,
어촌 경관, 어로문화 계승, 어촌지역산업 개발 등
+
6차 산업화, 귀어·귀촌 등

정부정책의 적극적 개입
(2000년대 이후)

↓
어촌공동체 다변화

Ⅱ. 어촌공동체와 어촌사회 변화

어촌사회의 대내적 변화

서산 동왕어촌계 사례



구분	과 거	현 행
1차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태, 바지락, 낙지, 주꾸미 등 생산 • 대부분 유통상인 판매(가격 불안정)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가로림만 11개 어촌계 생산협의체 구성 • 감태 세척시설 도입(품질제고)
2차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태 원물을 인근 가공시설에 보내 조미 감태 생산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가공시설 조성(조미감태 가공) • R&D → 감태분말 상품(초콜릿, 감태 양갱 등)
3차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지락 어촌체험마을 운영(4천명)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감태 유통망 판매 (학교급식, 서울소재 수협 20개소 등) • 감태 분말 초콜릿 만들기 체험 (갯벌체험과 연계한 상품 시너지 효과)

Ⅱ. 어촌공동체와 어촌사회 변화

어촌공동체 성격 재조명

변화된 시대의 상황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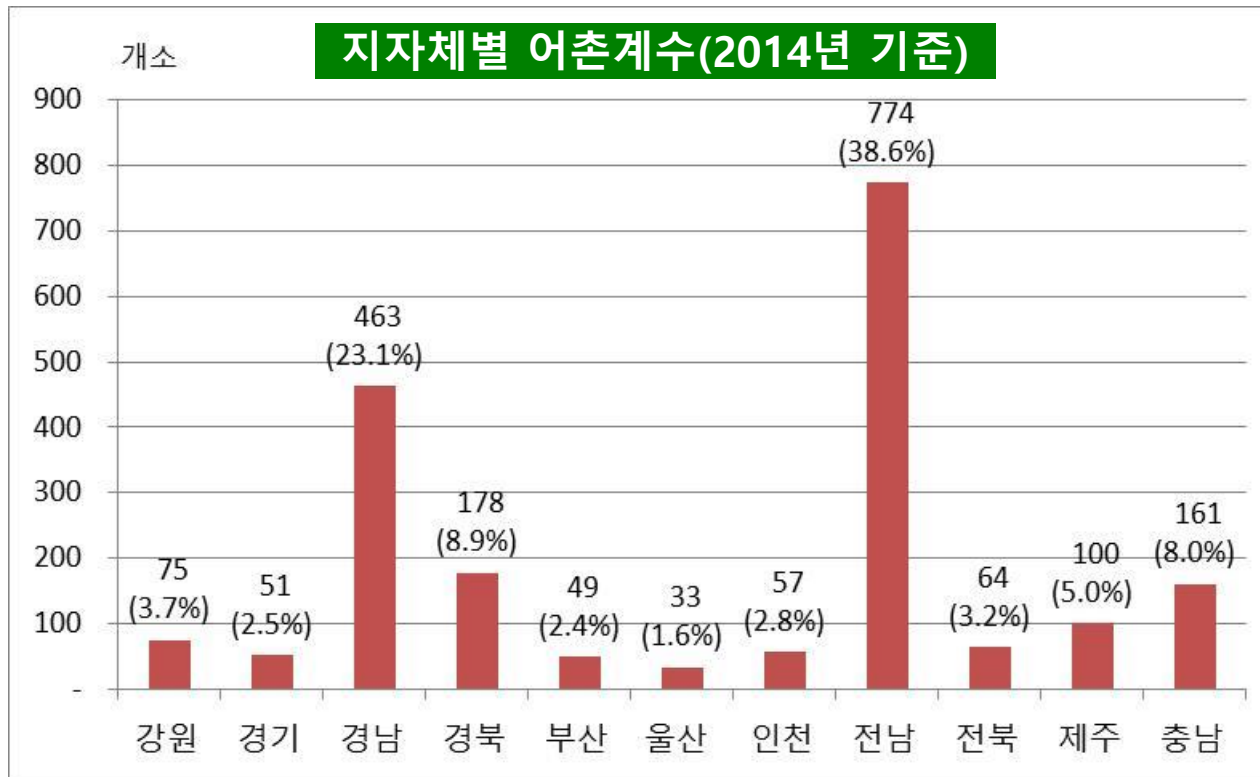
(지역/사회의 번영 → 개개인 경제활동, 구성원 간 네트워크, 협력·연대, 지역사회 봉사)

구분	전통적 어촌공동체	현대적 의미의 어촌공동체
가치추구	지역적 사회문화적 동질성 중시 단체적 성향에 초점	지역적 사회문화적 협력, 봉사 중시 단체적 활동과 병행하여 개인적 성향도 중시
경제활동	배타성	협력, 연대
거버넌스	관 주도의 민관협력	공동체 주도의 민관협력
확장성	마을단위 한정된 형태의 폐쇄적 구성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동체 간 협력 등 활성화
사업방식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하향식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게 공동체 스스로 선택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전국 어촌계 일반현황

- 어촌계는 1964년 1,955개에서 1972년 2,258개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005개 분포**
 - 지자체별 전남과 경남이 각각 38.6%, 23.1%로 전체 어촌계의 62%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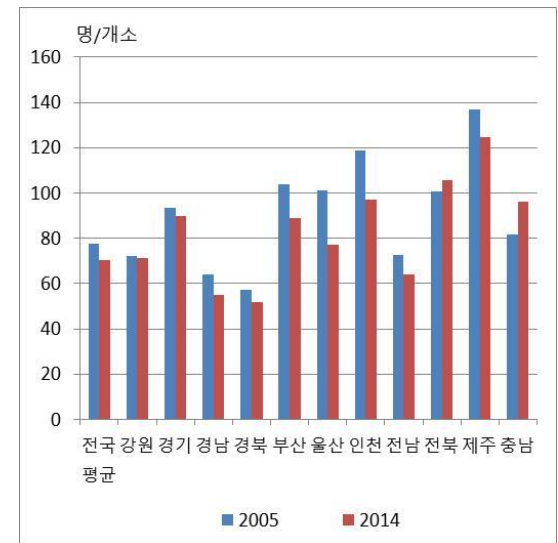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전국 어촌계 일반현황

■ 2005/2014년 어촌계당 계원수의 변화

- 지난 10년 동안 어촌계 1개소당 계원수는 전국적으로 9.2% 감소
- 대부분의 지자체가 감소하였으나 전북, 충남은 오히려 증가

구분	어촌계당 계원수			20인 이하 어촌계	
	2005	2014	증감율	2014	비중
전국 평균	77.5	70.4	-9.2	202	10.1
강원	72.2	71.2	-1.4	17	22.7
경기	93.5	89.7	-4.1	7	6.5
경남	63.8	54.8	-14.1	56	12.2
경북	57.2	51.6	-9.8	30	19.6
부산	103.9	89.0	-14.3	2	4.9
울산	101.2	77.2	-23.7		
인천	118.8	97.1	-18.3		
전남	72.7	64.0	-12.0	82	9.7
전북	100.6	105.6	5.0	2	3.1
제주	137.0	124.6	-9.1	0	0
충남	81.5	96.1	17.9	6	3.7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전국 어촌계 일반현황

■ 어촌계당 어업권 면적(ha, 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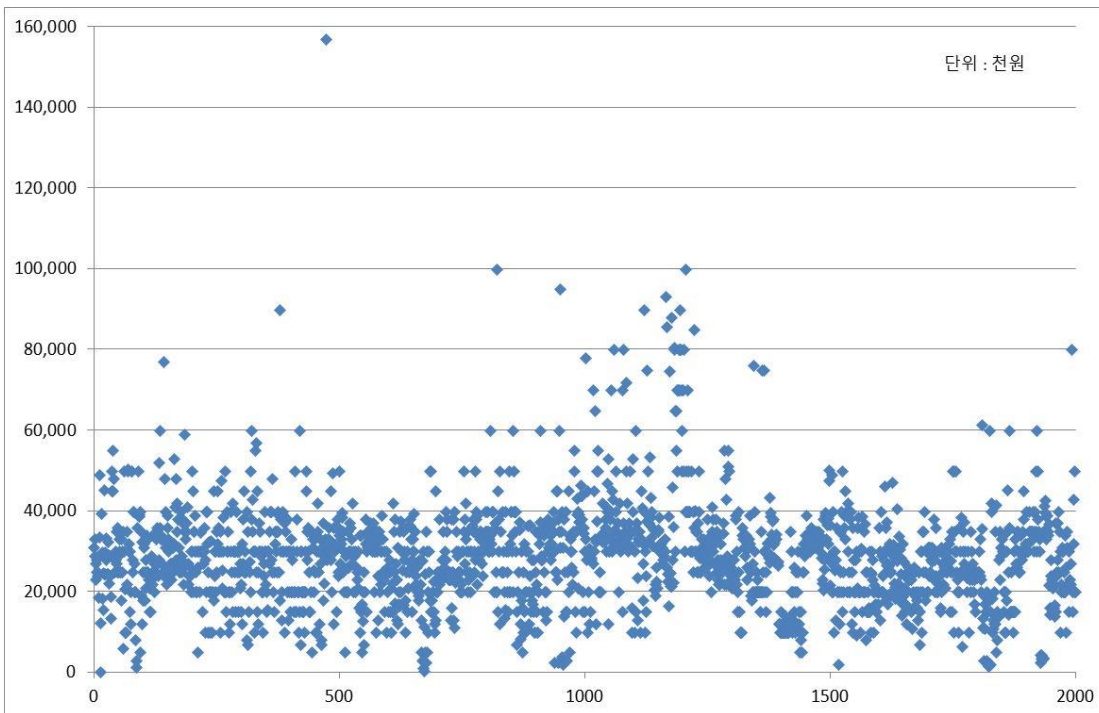
- 전국평균 대비 강원, 제주, 경기지역은 마을어업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고, 해조류는 전남, 전북, 패류는 전북, 충남, 전남, 협동양식은 제주, 강원, 경북지역이 큰 것으로 집계됨

구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등	복합양식	협동양식	마을어업
강원	14.1	4.4	5.1	0.1	4.3	26.6	105.6
경기	4.8	11.6	5.5	0.1	0.2	9.7	97.3
경남	2.6	20.3	8.7	1.3	5.2	2.0	71.3
경북	4.4	0.4	0.8	0.6	0.6	12.6	35.4
부산	1.2	10.8	0.0	0.0	11.3	0.2	35.3
울산	2.7	4.3	2.2	0.6	1.6	2.4	25.8
인천	7.7	5.5	19.8	0.7	6.4	0.5	49.0
전남	1.1	60.0	26.6	1.0	14.3	0.2	53.9
전북	1.6	57.5	35.2	5.0	5.6	0.1	24.7
제주	0.9	0.0	0.1	0.1	28.5	48.9	144.7
충남	1.2	15.0	29.1	2.7	3.9	0.3	30.7
전국	2.5	31.9	16.8	1.2	9.3	5.4	60.0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전국 어촌계 소득 분포 분석

- 어촌계 분류평정 상의 2,005개 어촌계 호당 평균 소득은 2~4천만 원 수준에서 밀집
 - 전국평균으로는 어선어업, 양식어업, 복합어업의 소득편차가 크지 않고 비슷
 - 어선어업은 충남, 양식어업은 부산, 전남, 복합어업은 부산, 울산 소득이 높은 것으로 집계
 - 어촌계 분류평정의 소득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다소 부족, 단순 참고자료로 이용 필요



구분	어선어업	양식어업	복합어업
강원	29,520	19,345	25,367
경기	26,785	23,549	28,467
경남	28,408	30,435	28,365
경북	24,995	18,790	25,046
부산	32,596	33,778	34,048
울산	23,334	28,900	33,802
인천	28,785	15,686	24,055
전남	29,305	31,689	29,050
전북	26,419	26,500	24,405
제주	31,870	21,084	23,188
충남	32,318	25,911	28,319
전국	28,184	29,742	27,863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어촌공동체 귀어·귀촌 실태

- 2015년 귀어가구는 총 991가구로 매년 증가 추세('13년 650가구, '14년 917가구)
 - 귀어가구 중 1인가구가 전체의 70.4% 차지, 2인가구 19.1%
 - 전남이 34.6%, 충남 34.3%로 두 지자체가 귀어가구의 약 70%를 차지(전남은 수산업 세력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귀어로 연결, 충남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과 어촌체험마을, 낚시어선업 등의 활성화로 귀어인들이 상대적으로 선호)
- 귀어인과 동반가구원 포함한 전체 귀어가구원은 50대가 가장 많고 30대 이하도 많아

<2015년 연령별 귀어현황>

구분	귀어인		동반가구원		합계	
		비중		비중		비중
30대 이하	207	19.3	229	61.4	436	30.2
40대	253	23.6	40	10.7	293	20.3
50대	398	37.1	49	13.1	447	30.9
60대	176	16.4	31	8.3	207	14.3
70대 이상	39	3.6	24	6.4	63	4.4
합계	1,073	100.0	373	100.0	1,446	100.0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어촌공동체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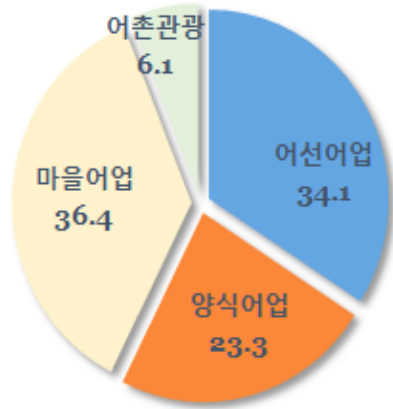
설문조사 개요

구분	어촌공동체 설문조사
목적	귀어·귀촌인 등 신규인력 유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어촌계 사업수행의 문제점, 어촌공동체 개편방안 등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어촌계장 또는 어촌계 간사 (지역별 어촌계 분포 고려)
조사방법	면접원 방문조사 및 전화조사 병행 (전문 리서치회사 위탁)
조사시기	6월 27일~7월 22일
표본수	401개소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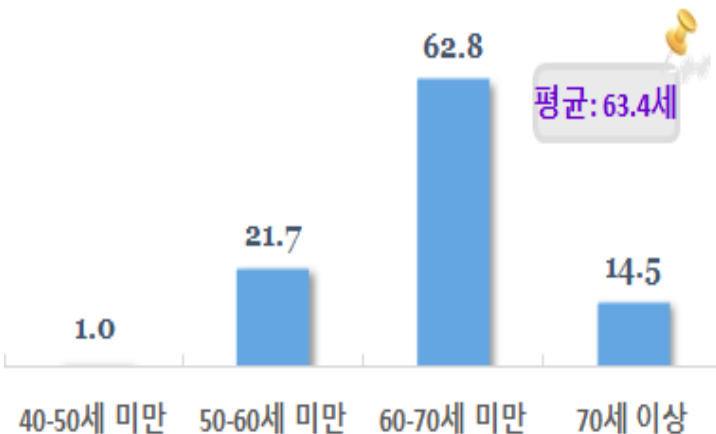
어촌공동체(어촌계 401개소) 설문조사 결과

- 어촌계 내 소득을 창출하는 주 업종 : 마을어업>어선어업>양식어업>어촌관광
- 어촌계의 평균 연령은 63.4세, 60대 이상 비중이 전체 계원의 77.3%나 차지



■ 어업권 소유 및 이용실태

- 어촌계의 약 78%가 마을어업 면허권 소유
- 대부분의 어업권은 어촌계 직영 또는 계원 행사계약을 통해 이용, 외지인 임대 응답비율은 낮았으나 실제로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



구분	보유 어촌계수 (총 401개소)	어촌계 직영	계원 행사계약	외지인 임대	합계
어류양식	51(12.7%)	40.6	56.1	3.3	100.0
패류양식	150(37.4%)	58.1	41.1	0.8	100.0
해조류양식	86(21.4%)	37.4	62.4	0.2	100.0
정치망어업	44(11.0%)	34.3	65.7	0.0	100.0
복합양식	43(10.7%)	66.7	33.3	0.0	100.0
협동양식	39(9.7%)	87.6	12.4	0.0	100.0
마을어업	313(78.1)	74.0	23.9	2.1	100.0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 귀어·귀촌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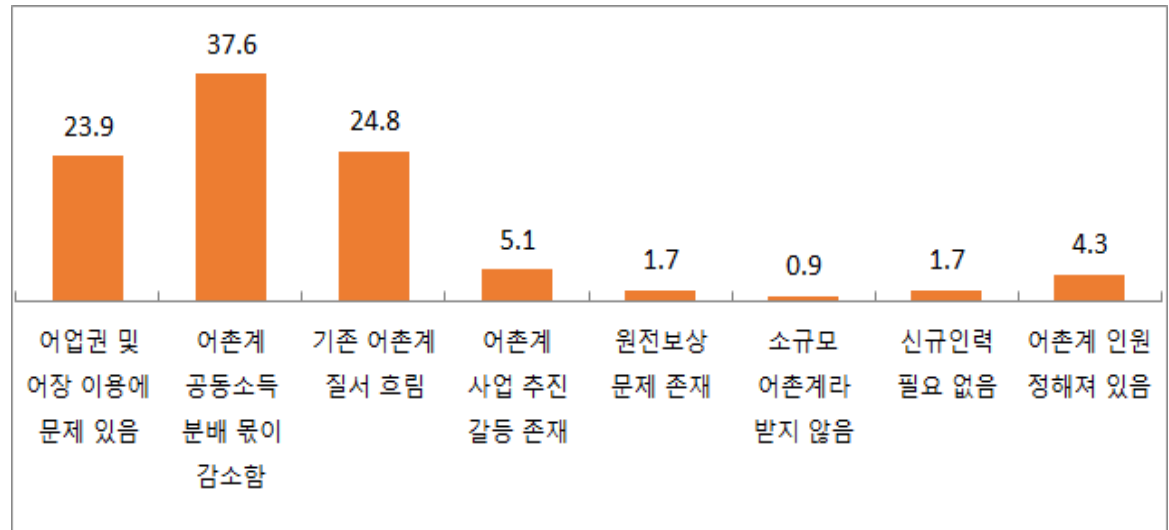
- 어촌계 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1.3%로 매우 높음
- 신규인력 유입에 대한 어촌계의 태도도 긍정적이 68%로 부정적 태도 29%보다 높았음

신규 귀어·귀촌인 유입 필요성	
문항	비중
매우 필요함	44.9
대체로 필요함	26.4
별로 필요하지 않음	20.9
전혀 필요하지 않음	7.2
잘 모르겠음	0.5
합계	100.0

신규인력 유입에 대한 어촌계의 태도	
문항	비중
적극 받아들임	33.9
대체로 받아들임	33.7
별로 받아들이지 않음	22.9
전혀 받아들이지 않음	6.2
잘 모르겠음	3.2
합계	100.0

■ 어촌계에 신규인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유

- 어촌계 소득배분 몫이 감소하기 때문, 기존 어촌계의 질서를 흐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및 애로사항

- 정부나 지자체 도움 없이 어촌계 스스로 수익창출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 응답은 23%에 불과, 대부분의 어촌계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응답

<어장이용 및 수산자원 조성 시 애로사항>

구분	응답률
수산자원의 감소	28.7
어장의 노후화, 환경오염, 폐사 등	18.7
종묘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	21.2
어업권(마을어장), 어선세력 등 어업기반의 부족	9.0
어촌계 인력 부족, 고령화로 인한 생산확대 어려움	21.9
기타	0.5
합계	100.0

<어촌계 개발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구분	응답률
어촌체험·관광, 수산물가공 등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부족	45.6
어촌계원들의 비협조, 어촌계 갈등으로 인한 결속력 약화	6.2
어촌계 인력의 부족, 고령화로 신규사업 추진에 한계	25.4
사업 노하우나 전문성의 부족	7.2
신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나 관광자원의 부족	13.7
기타	1.7
합계	100.0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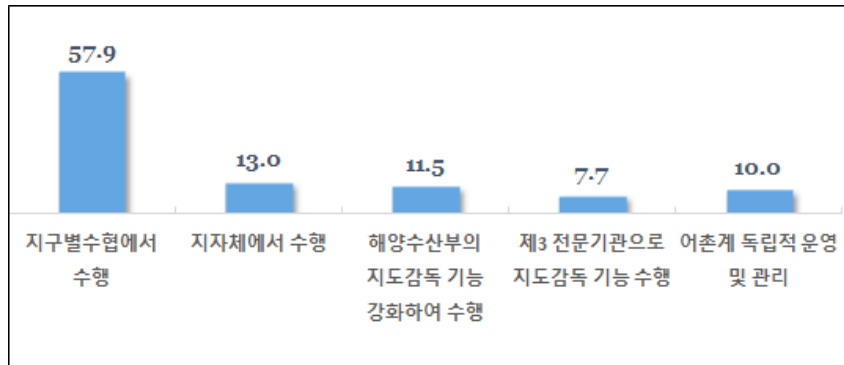
■ 향후 어촌계 지도 감독 기능에 대한 의견

- 현재와 같이 지구별수협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8% 차지

■ 최근 어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생산중심 어촌계에서 어촌관광, 6차산업화 등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개편에 대해서도 약 80%가 동의

- 어촌계 소득창출, 관광객 유입 확대 등을 위해 인근의 숙박음식점업과 협력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74%로 매우 높아 어업인들도 어촌공동체의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

<향후 어촌계 지도감독 기능에 대한 의견>




<어촌공동체 개편 및 숙박음식점업과의 협력 필요성>

구분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보통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공동체 개편에 대한 의견	56.6	22.9	10.7	9.5	0.2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숙박.음식점업과의 협력 필요성	46.9	27.4	13.7	11.5	0.5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어촌공동체 및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종합평가(시사점)

- 어촌의 고령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어촌계 평균연령이 63.4세로 조사)
- 귀어·귀촌, 어촌계 가입 등에 다양한 형태의 진입장벽이 존재하지만 어촌공동체 내부적으로는 무조건적 배제가 아닌, 신규인력 유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일반국민들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이나 국민경제 및 산업적 측면에서 수산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
- 국민들은 귀농·귀촌에 비해 귀어·귀촌 의향이 낮고 더 어렵게 인식하고 있음, 특히 귀어·귀촌 생계수단으로서 어업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 국민들은 어촌주민들이 귀어·귀촌인에 대해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생각, 어촌공동체에 대해서도 폐쇄적이라고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어촌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귀어·귀촌의 활성화, 신규인력의 유입을 저해하고 있는 진입장벽의 완화,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촌공동체 개편방안이 필요함을 나타냄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어촌공동체의 문제점 : 법·제도·정책의 측면

구분	주요 문제점
이중 가입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계원 가입을 위해서는 <u>어촌계 정관</u>에 의거, 가입신청서와 수협 조합원 증명서류를 제출, 총회에서 자격유무 심사, 승낙여부 결정 정관과 별도로 대부분의 어촌계가 <u>자체 규약</u>을 마련, 거주기간, 가입비, 마을어업권 행사 등에 대한 실질적 제한조건을 규정
기반시설 투자 중심의 정책 지원 및 사후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관리어업 육성, 어촌 6차 산업화,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등이 주로 생산유통가공시설, 어장환경 개선 및 자원조성, 관광시설,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u>시설투자 중심의 지원이 주를 이룸</u> 문제는 <u>시설투자 후 관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외부에 임대</u>를 주고 운영하는 사례도 많음
어촌공동체 실태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통계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u>현행 수협 어촌계분류평정</u>이 조사내용, 정보로서의 가치, <u>통계 신뢰성 등에 문제가 많은 실정</u> 어촌공동체 구성원 정보, 어업생산활동, 어업 및 어업외소득, 어촌계 사업수행 내역 등 <u>공동체 전반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DB 구축이 시급</u>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어촌공동체의 문제점 : 운영·관리의 측면

구분	주요 문제점
어촌계 지도 감독기능 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설립인가, 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규정, 어촌계 지도 감독은 지구별수협 사무로 규정 • 지구별수협에서는 조합장 선거권을 가진 어촌계에 불리한 지도감독이 어려워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
어촌계장-계원간 갈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계장직 연임에 따른 월권, 어촌계 사업수행 및 회계의 불투명한 처리 등 내부적 갈등 표출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어촌계장 선출 시 금품살포, 혈연·지연 등 불법선거 발생 • 어촌계장-계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운영·관리제도 개선 시급
어촌계수입 배당에 따 른 사업재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마을어장 등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판매하여 마련된 어촌계 수입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신규사업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어촌계가 계원들에게 배당하여 소진 • <u>신규사업 추진 시 어촌계의 자부담 능력 전무</u>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어촌공동체의 문제점 : 공동체 인력의 관점

구분	주요 문제점
어촌공동체의 고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가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최근 10여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고령화는 어촌의 활력 저하 및 공동화, 어업생산활동의 위축, 공동체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제약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우려
어촌계원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와 더불어 어촌계원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것도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 2005년 전국 어촌계 평균 계원수는 77.5명에서 2014년 70.4명으로 감소 추세• 어촌계원 감소가 지속되어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 어업형태가 유사한 인근 어촌계의 통합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 필요

Ⅲ. 어촌공동체 실태 분석

국내외 공동체 사례

- 우리나라 농촌공동체는 해체에서 복원,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 산업화 및 도시화를 거치면서 농촌공동체가 해체, 최근 마을개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이 중시되면서 공동체 복원,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 → 중간지원조직, 농업회의소로 발전
- 일본 어촌공동체는 지역 어업협동조합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 어업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적 어업공동체, 조합원 출자, 자본력 큼, 2001년 평균 조합원수는 230명
 - 연안어장의 대부분 어업권 소유, 조합원 행사, 단, 진주양식과 정치망어업은 개인 면허
 - 어협 하부에 업종 중심의 部會로 구성, 어업권은 조합원이 행사, 행사료는 공동사업 재원으로만 사용
 - 어촌지역 활성화는 어촌공동체(어업협동조합)가 중요한 역할 담당
 - '바닷가 활력재생계획' 수립 및 추진에서 어업협동조합과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수산업재생위원회'에서 계획 수립, 가공업자, 관광업자 및 지역 전문가가 참여
- EU 어촌공동체는 어업인을 중심으로 수산기업, 지역주민, 관광업체 등 협력과 연대
 - 어촌공동체 활성화는 어업인과 협력, 연대가 가능한 주체를 포함시키고, 전문가 지원을 통해 성과 도출
 - FLAG는 4-5명 구성된 전문가들로 해당 지역내 어촌공동체를 현장 밀착하여 지원
 - 시설지원에 앞서 지역공동체의 역량,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성과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IV.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어촌공동체의 현상 인식

- 어촌공동체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공동체로서 어촌사회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 담당

- 어촌계 중심, 어업생산의 경제적 공동체 + 어촌지역 생활을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공동체



- 어촌공동체(어촌계)의 변화 및 활력 저하로 한계적 상황 직면

- 구성원 : 인력 감소('05년 77.5명→'14년 70.4명), 고령화(고령화율 32.2%), 신규인력 진입 어려움
- 어 장 : 마을어업 중심으로 생산, 개인이용 고착화 진행, 신규사업 투자 및 운영 능력 미약
- 성 격 : 공동생산·분배 → 개인이익 중시, 어촌의 구성원 다양화 및 다양한 공동체 등장으로 갈등
- 소 득 : 어가소득('14년 4,100만원), 어업소득 비중 하락('90년 52.1% → '14년 51.2%)
- 규 모 : 어촌계원 20인 이하 202개(10.1%), 마을어장 면적 ; 전북 24.7ha, 충남 30.7ha, 경북 35.4ha
- 환 경 : 보건, 의료, 교육 등 생활환경의 낙후

→ 공동체 내부에서도 신규인력 유입에 공감, 공동체 개편 및 타 산업과 협력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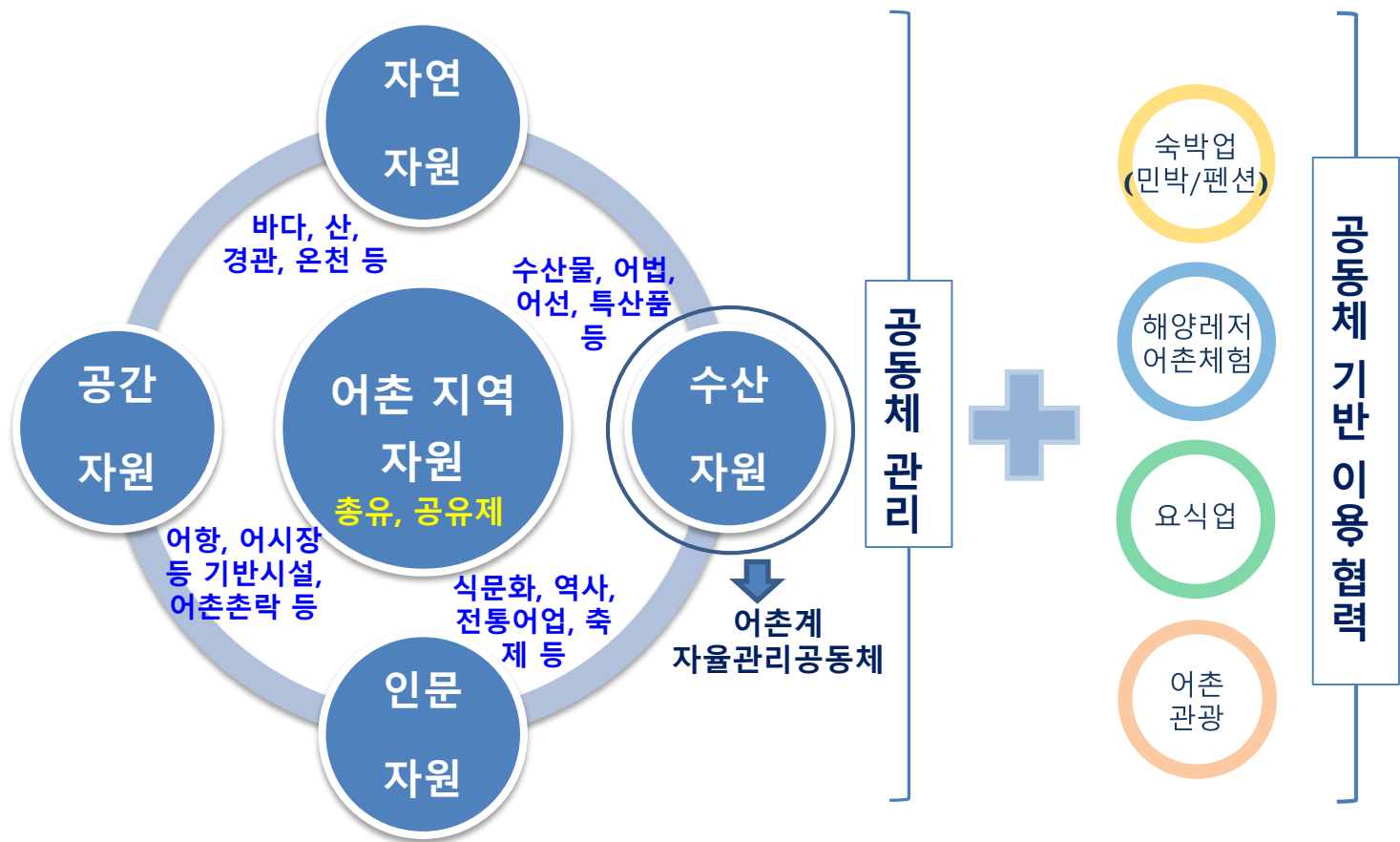
- 국민들의 어촌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정부 정책의 수립

- 어업활동 중심에서 전통문화 유지, 쾌적한 자연환경, 도시와 교류 확대, 어촌지역산업 발전
- 정부는 귀어·귀촌 종합대책, 삶의 질 향상, 지역산업 진흥, 6차 산업화 추진 등을 추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 및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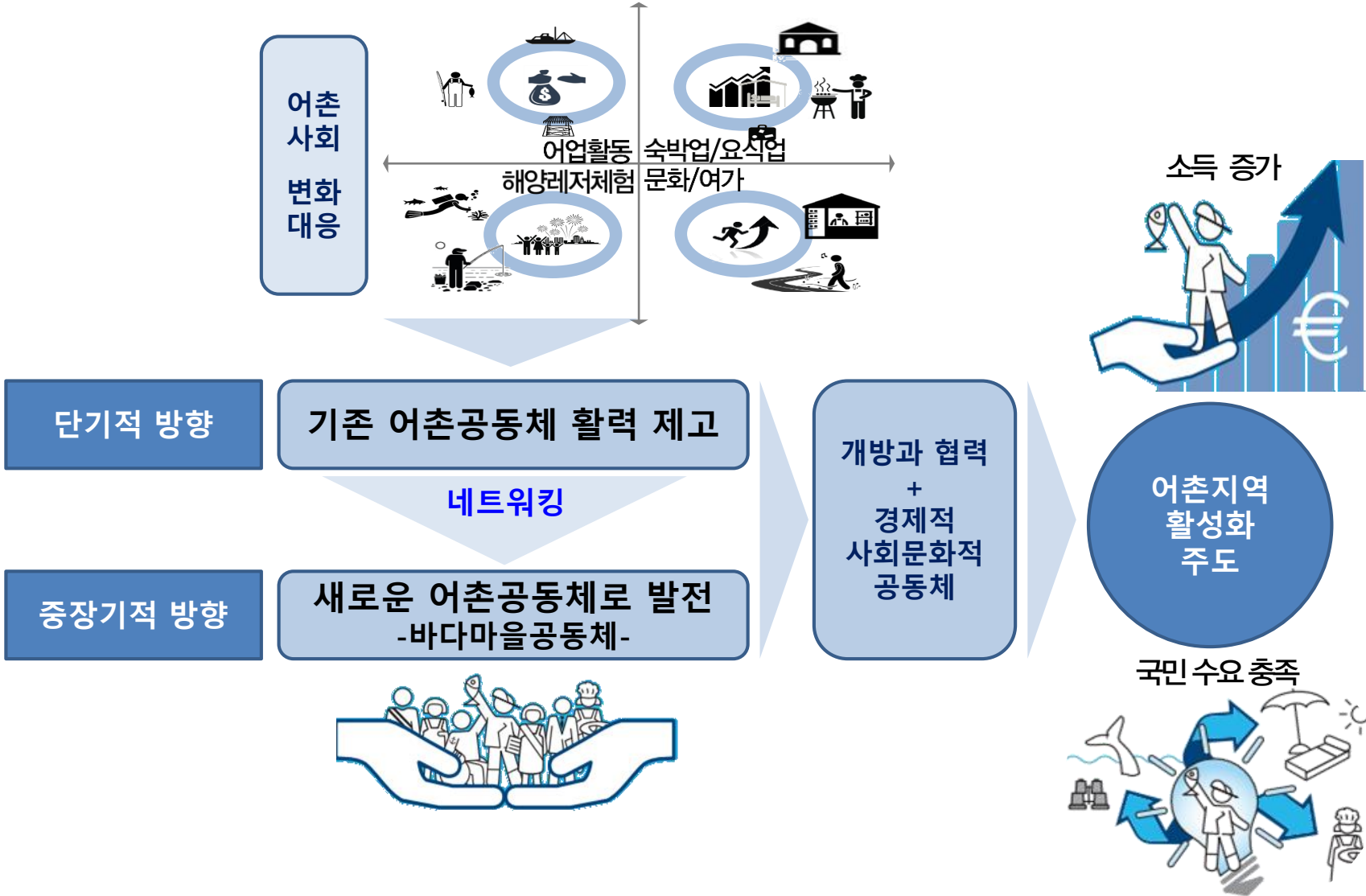
IV.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어촌 지역자원의 관리 및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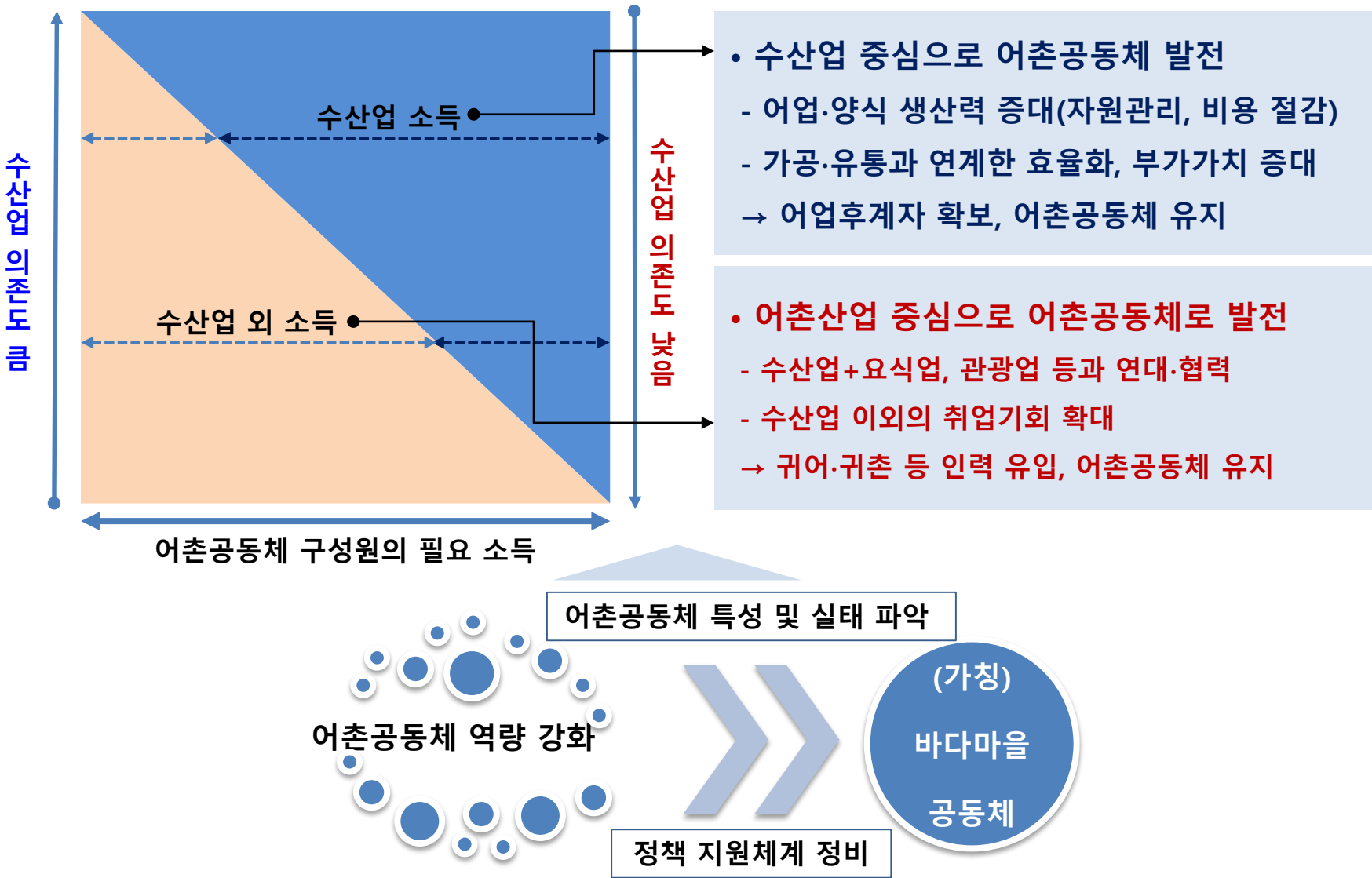
IV.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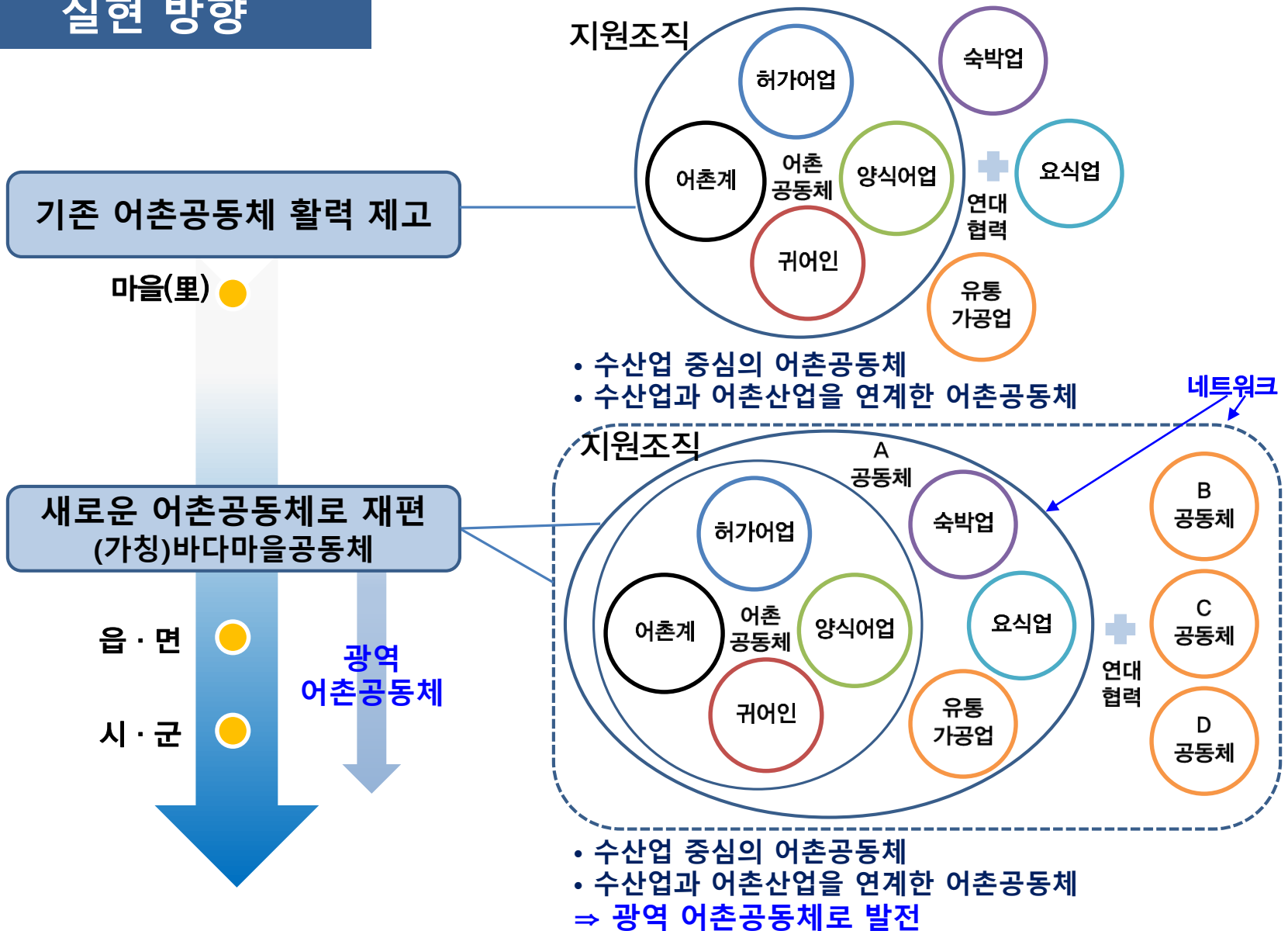
IV.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추진 전략



IV.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실현 방향



IV.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추진 과제

현행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어촌공동체는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진행, 신규인력에 대한 진입 어려움, 구성원 간의 갈등, 신규사업 투자 및 운영 능력 미약 등 활력이 떨어진 상황
- 어촌공동체 가입조건 완화 및 정보공개, 관리·감독 강화, 자체 자원 유보 유도 등을 통해 어촌공동체의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

■ 세부사업

- 어촌계원 가입자격 및 가입조건의 완화
 - 가입자격 : (현재)지구별수협 조합원 →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 가입조건 : 어촌계 정관 및 자체 규약 완화를 유도하여 가입 희망자는 준계원 활용
- 어촌계 업무 등의 정보공개 : 귀어인 등 신규 진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어장관리실태 공개, 공동체 임원 선정 및 결산의 개선, 지구별수협의 지도사업 강화
- 어촌계 자체 자원 유보 : 공동체 자체 자원 마련을 위해 일정 부분 적립 유도(정관 명문화)

IV.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추진 과제

어촌공동체 실태조사 및 DB화 기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어촌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국민적 정책적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촌공동체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가 미흡, 수협의 '어촌계 분류 평정'의 조사·집계 등 오류가 많아 신뢰성 문제 있음
- 어촌공동체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공동체 진단·평가, 맞춤형 정책 개발 활용

■ 세부사업

- 어촌공동체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조사내용 : 공동체 구성원(연령, 가구원), 수산업 현황, 어업 및 어업외 소득, 사업수행 내역, 어장관리실태 등
 - 조사방법 및 시기 등
- 어촌공동체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 어촌공동체 실태조사 추진
- 어촌공동체 진단·평가 및 DB화, 정보공개

IV.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추진 과제

바다마을공동체로 재편-1

- 배경 및 필요성
 - 어촌공동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마을 단위 또는 인접 마을의 어촌공동체를 통합·협력 추진하여 '(가칭) 바다마을공동체'로 재편, 수산업 중심 또는 어촌산업 중심으로 다양화
 - 어촌공동체 통합(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어선, 양식)), 어촌산업과 연대(숙박업, 요식업 등)
- 새로운 어촌공동체 성격

구분	기존 어촌공동체	바다마을공동체
공동체 범위	어촌 마을(里)	어촌 마을(里), 인접 마을(읍·면 등)
공동체 주체	어촌계 중심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영어조합 등 통합·협력
공동체 특성	마을어장 중심으로 배타적 폐쇄적 구성 한정된 구성원 이익 추구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동체 간 개방 및 협력 어촌 전체의 활성화 및 참여 구성원 이익 추구
사업 범위	해면, 어업생산 활동	해면과 육지, 수산업과 어촌산업의 연계
사업 내용	어업생산 국한, 일부 판매 및 어촌체험	지역자원 및 공동체 특성을 반영하여 수산업 중심, 어촌산업 중심으로 다양화
사업추진 방식	정부 주도의 획일적 추진	어촌 여건 및 공동체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추진

IV.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추진 과제

바다마을공동체로 재편-2

■ 바다마을공동체의 유형

- 수산업 중심의 바다마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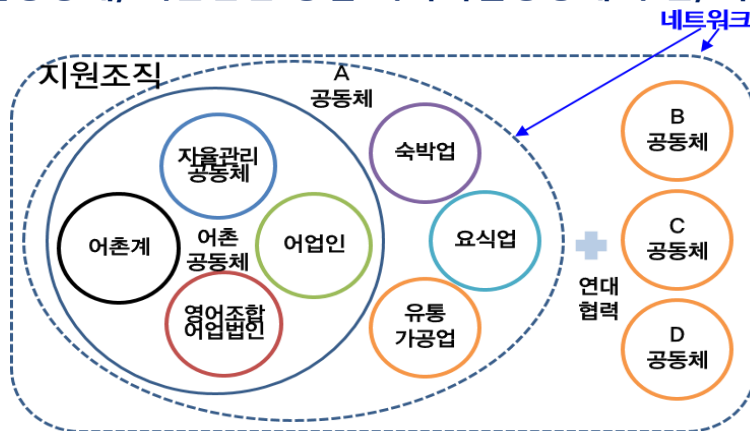
- 공동체 중 수산업 소득의존도 높은 공동체 대상, 생산력 증대(자원관리), 가공·유통과 연계한 부가가치 증대
- 공동체 직매장 또는 인터넷판매, 어촌마을의 요식업, 숙박업과 연대 → 어업후계자 확보, 어촌공동체 유지

- 어촌산업 중심의 바다마을공동체

- 공동체 중 수산업 외 소득의존도 높은 공동체 대상, 어촌마을의 요식업과 관광업 등 어촌산업과 협력
- 수산업 이외의 어촌산업으로 취업기회 확대 → 귀어·귀촌 활성화, 어촌공동체 유지

■ 세부사업

- 기반조성 : 실태조사, 관련법 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원조직 정비
- 시범사업 추진 : 수산업 중심 바다마을공동체, 어촌산업 중심 바다마을공동체 추진, 사업평가 실시
- 본 사업 추진 : 전국 어촌마을로 확산



IV.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추진 과제

광역 바다마을공동체로 발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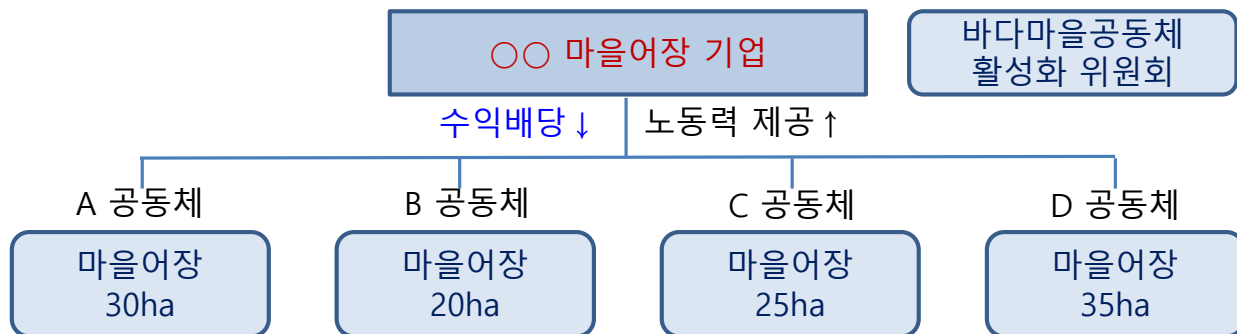
■ 배경 및 필요성

- 어촌공동체의 활력 제고 및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바다마을공동체 간 연대·협력 추진
- 바다마을공동체 간 마을어장 통합, 수산업 기능 재편·통합, 어촌산업 연대·협력으로 어촌공동체 발전 및 어촌경제 활성화

■ 광역 바다마을공동체 유형

1) 마을어장 통합으로 생산력 증대 어촌공동체

- 공동체 중 구성원 작은 곳, 고령화 높은 곳, 마을어장 면적·생산성 낮은 곳의 인접 마을 어촌공동체 참여
- 지구별수협 출자하여 '○○ 마을어장 기업' 설립, 참여 공동체 마을어장 현물 출자하여 바다목장사업 등 추진
- 어촌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 생산, 자원관리, 판매 등 경영컨설팅



IV.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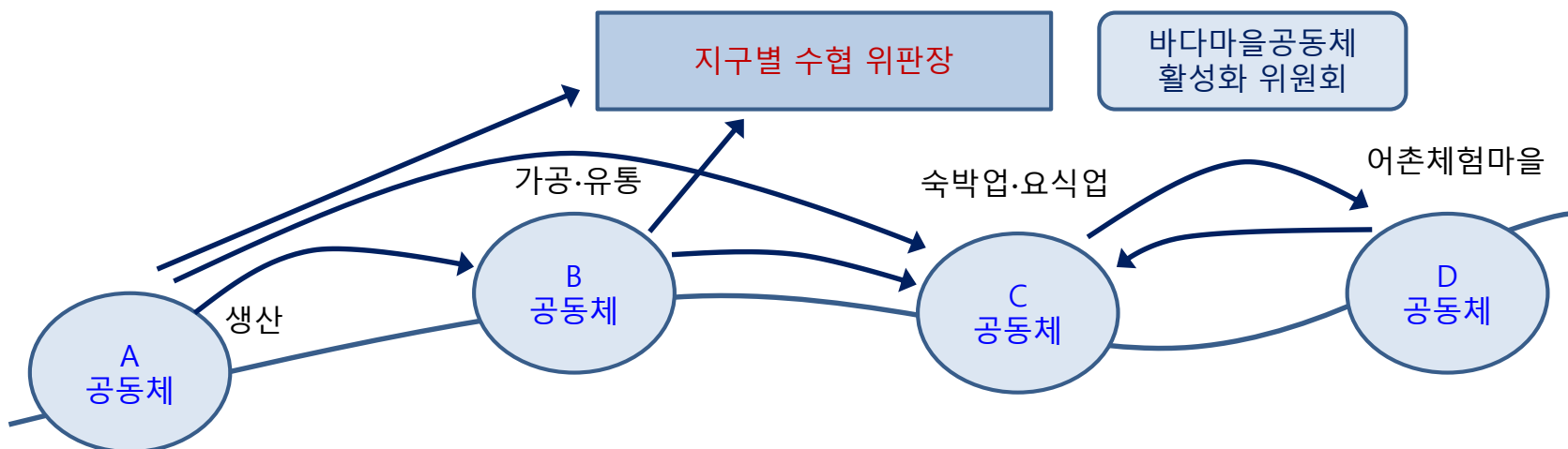
추진 과제

광역 바다마을공동체로 발전-2

■ 광역 바다마을공동체 유형-2

2) 어촌마을 공동체 간 수산업 기능 재편·통합

- 인근 마을 어촌공동체의 수산업 기능 재편·통합 : 수산물 생산, 가공·유통, 숙박업, 요식업, 체험·관광 등 어촌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역할 분담
- 'A 공동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B 공동체'에서 가공·유통하여 'C 공동체'의 숙박업 및 요식업에 제공, 'D 공동체'의 체험·관광객을 'C 공동체'의 숙박업 및 요식업으로 안내
- 어촌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 수산물 상품화, 전통음식 개발, 판매 전략, 관광상품 개발 등 경영컨설팅



IV. 어촌공동체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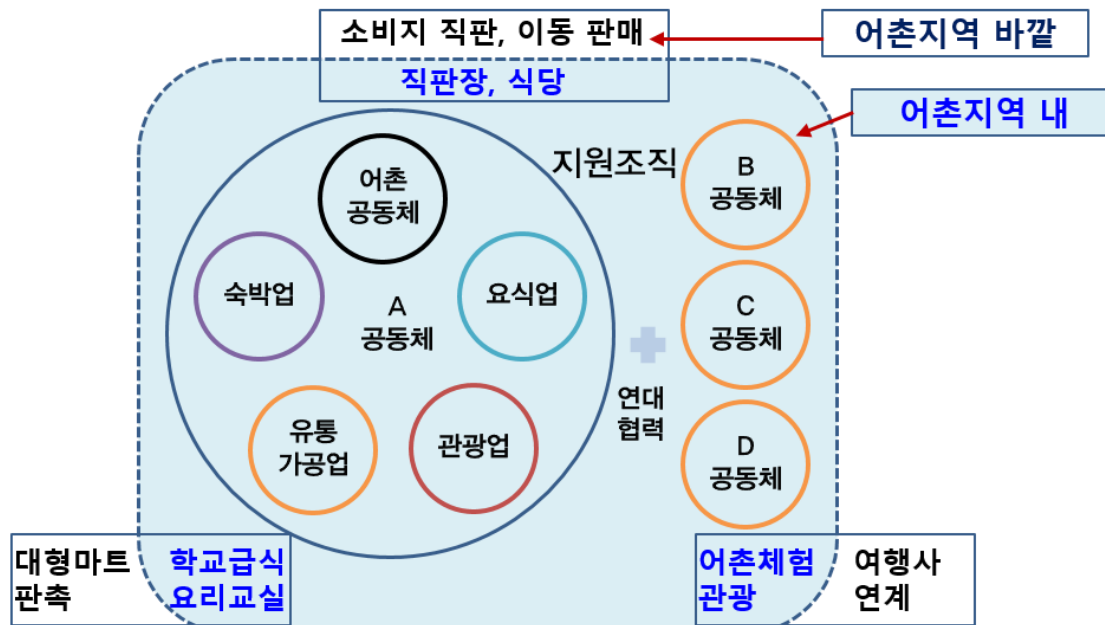
추진 과제

광역 바다마을공동체로 발전-2

■ 광역 바다마을공동체 유형-3

3) 지역 공동체 간 어촌산업의 연대·협력

- 인근 마을(읍·면) 또는 지역(시·군) 공동체 간 어촌산업의 연대·협력 : 수산업, 가공·유통업, 숙박업·요식업, 관광업 등과 연대·협력
- 지역의 'A 공동체', 'B 공동체', 'C 공동체', 'D 공동체' 간 연대·협력하여 어촌지역 내외의 수산물 판매, 수산물 소비, 도시와의 교류를 공동으로 대응
- 어촌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구성 : 지역 특산 수산물 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지역 전통음식 개발 등 컨설팅





감사합니다 !